

#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하라”

### 전북 포함 13개 시도교육감 교육부 방침에 정면적으로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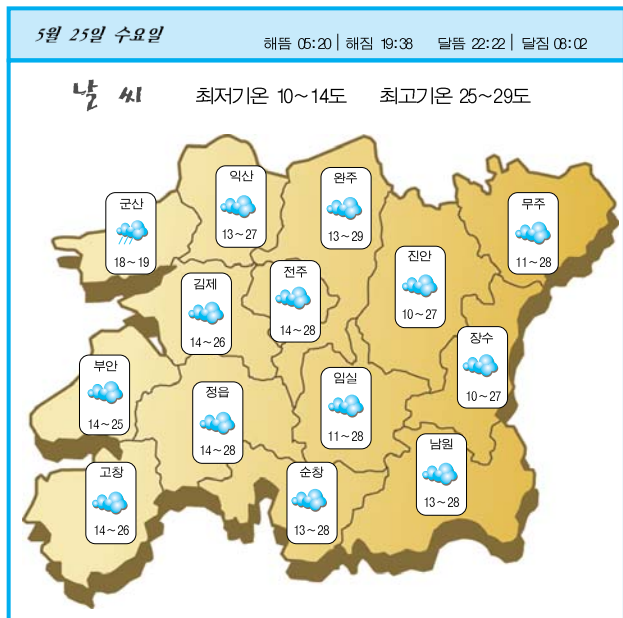
일부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부 간 또 하나의 날선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때문이다. 24일 전북을 포함한 진보성향의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에 대해 정면 반발하며 면직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희국 광주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감 대표로 기자회견을 열고 “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

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 발전의 동 반자로 받아들여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성명이 교육감 최종 결재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직권면직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3개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에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하면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도 해직교사가 노조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원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표현된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은 반시대적, 퇴행적 정책들이 누적돼 발생했는데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반시대적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후속 처리 문제를 이번 주 내 매듭짓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25일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88명에게 학교 복귀를 명령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35명을 최종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직권 면직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주 3명 가운데 사립교원 1명을 제외한 공립교원 2명에 대해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민형기자



## 전주시,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 2020년까지 200억원 투입

전주시가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침체된 중앙동과 노송동 풍남동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주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1차 관문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지난해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중심시가 지형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원도심지역의 기능을 기존 행정과 업무 상업 중심에서 문화와 관광, 주거 등의 기능을 증진시켜 상주 및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우와 시원하다

24일 오후 모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도전 근현대역사 골든벨'에 참석한 학생들이 냉풍기에 바람을 쐬고 있다. 역사골든벨은 근현대사기념관의 운영을 맡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도시개발사업이 도시 외곽지역 위주로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간의 경제·사회적·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활성화지역의 사업성과를 인접지구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사업대상 지자체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관문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올해 착수되는 33개 지역에 대한 관문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2차례의 관

문심사를 통과한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00억원의 국비지원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7월로 예정된 2차 관문심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단계를 평가하는 사항으로, 핵심전략 확정 및 세부 단위사업 시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주민참여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수준 사업 시행주체 발굴 등 세부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시는 2차 관문심사에 대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거점시설(전라감영) 기능과 연계강화를 위한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 보행자를 위한 시설, 건축물 및

가로시설물 정비, 도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공급을 위한 공개활동, 필지조정, 환지 등의 정책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박선이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과 추진 등의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재원을 반드시 확보해 그동안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활성화계획 수립부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전북교육청, 30여개 중·고 학생회실 설치비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0여개 중·고등학교에 학생회실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전주 해성고 익산 이리여고 등 고등학교 16곳과 전주 성심여중 김제 금성여중, 남원 하늘중 등 중학교 22곳이다. 이들 학교는 교실 절반(33㎡) 크기 이상의 학생회실을 만들게 되며 500만원씩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하거나 비품을 구입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자치 활동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고 학생회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곳 가운데 지원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회실은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높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기초 환경 가운데 하나라며 “앞으로도 학생회실을 꾸준히 확충해 학생의 참여와 소통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전주문화재단 예원빌딩으로 사무실 이전

전주문화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임환이) 전주시청 맞은편 예원빌딩 7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전주문화재단은 지난 10년간 현 위치(완산구 권삼득로 70)에서 업무를 추진해왔다. 사무실 이전은 전주문화재단이 팔복문화예술공장 조성 및 동산동 공연연습장 운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한옥마을 상설공연단 운영,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사무공간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또한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문화재단의 이전으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주변 기반시설 정비, 부지매입, 공공시설 등 선도사업 추진,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한옥마을과 연계해 전통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단 사무실이 이전하는 예원빌딩은 현 사무공간에 비해 공간 활용성 및 대중교통 이용성 접근성 등이 개선돼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재단은 이달 말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6년에 출범한 (재)전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전주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김영재기자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